



일본 중의원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일 아베 신조 총리(자민당 총재)가 동일본 대지진(2011년 3월11일)과 원전 사고 피해 지역인 후쿠시마(福島)현 소마(相馬)시를 찾아 선거유세를 하며 자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日 중의원 선거운동 돌입 '아베정치' 심판대 올랐다

아베노믹스·원전 재가동 문제 등 최대 쟁점

일본의 중의원 선거(총선)가 2일 공식 개표가 12일간의 선거 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전국 295개 소선거구에서 최대 득표자 1명씩 295명을,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나눈 광역 선거구에서 비례대표 180명 등 모두 475명을 중의원으로 선출한다.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와 집단 자유권 행사 용인, 원전 재가동 문제 등 '아베정치'에 대한 심판이 이번 총선의 최대 쟁점이다.

14일 투·개표가 시행되는 이번 선거에 총 1191명이 입후보했다. 이는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때의 1504명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이다.

또 이번 선거의 소선거구에는 959명이 입후보, '1인2표제(소선거구 후보 및 정당투표)'가 도입된 이후 최소라고 NHK는 전했다.

교도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자민당은 소선거구 283명과 비례 단독(소선거구에는 출마하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로만 이름을 올린 경우) 69명 등 352명을, 제1야당인 민주당은 소선거구 178명과 비례

단독 20명 등 198명의 후보를 냈다. 민주당 후보자 수는 1998년 창당 이래 가장 적은 숫자다.

이번에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51명, 유신당은 84명, 차세대당은 48명, 공산당은 315명, 생활당은 20명, 사민당은 25명, 신당개혁은 4명을 내세웠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자민·공명당의 과반수 의석(238석) 획득을 이번 총선의 승패 라인으로 제시했으며, 민주당은 100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야당들은 집권 자민당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세배에 달하는 지지율을 보이는 가운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 후보 단일화 작업을 추진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이번에 공산당을 제외한 야당이 후보를 단일화한 선거구가 197곳으로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 때의 65곳에 비해 대폭 늘었다고 집계했다.

이에 따라 자민당과 공명당을 제외한 다른 당에서 복수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는 앞선 총선 때 227개였는데 이번에는 60곳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여야 당수는 이날 전국 각지에서 '출

정'을 공식 선포했다.

동일본 대지진(2011년 3월11일)과 원전 사고 피해 지역인 후쿠시마(福島)현 소마(相馬)시를 찾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자민당 총재)는 "우리는 15년간 겪은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간신히 잡았다"며 "이 선거에서 승리해 부흥을 진행하고 강한 경제를 회복해 일본을 다시 세계의 한복판에서 빛나는 나라로 만들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와 같은 후쿠시마현의 이와키시를 방문한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민주당 대표는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숨기기 위한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라고 지적한 뒤 "이번 선거는 지금까지의 흐름을 바꿀 기회"라고 말했다.

또 요코하마(横浜)시에서 유세한 에다 겐지(江田憲司) 유신당 공동대표는 "아베의 자민당은 기득권의 수렁에서 발을 뺄 수 없었기에 진정한 국민 복지의 개혁을 못했다"며 "규제라는 알반을 부술 수 있는 것은 유신당 뿐"이라고 주장했다.

도쿄 신주쿠(新宿)에서 연설한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은 "아베 정권의 2년은 폭주의 2년"이라며 "폭주 정치를 심판하고 정치를 바꿀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中 공무원 임금, 성과로 결정 '철밥통 깨기'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앞으로 일반 공무원들의 임금을 업무성과, 업무능력과 직결시켜 결정하는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중국인 이번 조치가 지나치게 낫다는 평가를 받은 공무원 월급을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내세우지만, 본질적 목적은 관료사회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에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 2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제7차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縣) 이하 기관이 공무원 직무(직위)·직급(대우등급)을 병행하는 제도를 건립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심의·통과시켰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이 3일 보도했다.

이번 결정으로 대다수 하위직 공무원들은 직위승진 없이도 높은 수준의 봉급을 받을 길이 열렸다. 현 단위 이하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전체(약 700만 명)의 60%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직위승진 없이는 봉급상승도 없었다. 중국 현 단위 행정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한 대학 졸업

자 직위는 근무기간이 쌓이면서 높아지지만, 비교적 높은 수준의 봉급을 받는 직위는 매우 한정돼 있어 어느 정도 직위에 이르러 봉급이 사실상 '동결'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중국 행정개혁 전문가인 왕위카이(汪玉凱)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결국 현행 제도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부분은 직무-대우(봉급)의 연계부분"이라며 "좋은 대우를 받으려면 '관(官)'(직위가 높은 공무원)이 돼야 하는 현실에서 많은 모순이 발생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봉급 수준과 직결되는 직위승진에 현실적 제한이 많은 상황에서 공무원에게 새로운 봉급 상승의 통로를 열어주는데 목적이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에 따르면 2012년 현재 공무원 연봉은 4만6207위안(약 836만원)으로, 중국 내에서는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할 때마다 '공무원 봉급 인상론'이 불거졌다.

중국 지도부 역시 이번 결정에서 현 단위 이하의 행정기관에 '직무승진' 외에도 '직급승진'을 두는 것은 광대한 기층공무

원의 적극성을 끌어내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직급승진'의 최대 기준은 업무능력과 업무성과 등이 될 것으로 알려져 이번 조치는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상징처럼 여겨져 온 관료조직의 '철밥통 깨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이른바 '최고인민법원 순회법정'을 설치하고 두 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담당하는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을 설치하는 방안 등도 심의·통과시켰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 10월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헌법통치'를 공식 채택하고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사법독립' 조치를 추진해나간다고 선언한 바 있다.

순회법정은 해당 지역 내에서 최고인민법원 역할을 대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당내 최고 검찰기구)의 파견 활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해 '부정부패 사각'을 없애고, 도시호구(戶口) 취득을 조건으로 농민 택지를 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도 채택됐다. /연합뉴스

"현대판 노예제 2020년까지 종식하자"

세계 종교 지도자 공동선언

프란치스코 교황 등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2일(현지시간) 인신매매나 강제노동, 매춘 등 반인륜적인 현대판 노예제를 2020년까지 종식하자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바티칸 교황청에서 이날 열린 선언 조인식에는 프란치스코 교황, 영국 성공회의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 인도교 지도자 마타 암리타나다마워, 불교 지도자 티넨안과 동방정교회, 유대교, 이슬람교 지도자 등이 참석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공동선언에 서명한 종교 지도자들은 전 세계 3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현대판 노예들을 2020년까지 해방하기 위해 각자의 종교 조직과 함께 모든 힘을 쏟기로 약속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공동선언에서 "신의

관점에서 보면 소년·소녀, 남성·여성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자유인"이라며 "자유와 평등의 혜택을 위해 존재하도록 운명지어졌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대판 노예제도를 없애는 것을 재임 중 주요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았으며 교황청 과학원에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 학술대회와 연구를 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바티칸은 올해 초 정부와 기업, 교육을 통해 노예 노동 공급망을 제거해 현대판 노예제를 폐지할 수 있도록 여러 종교 간 협력 구상인 '글로벌 자유 네트워크'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네트워크의 창립 회원인 '워크프리제단'(WFF)은 1420만 명이 노예화된 인도, 베트남, 중국,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세계 인구의 61%가 사는 이들 5개국에 노예제가 남아있다고 추정했다.

/연합뉴스

美 하원 '이민개혁' 백지화 추진

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이번 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아직 다수 의석인 상원을 통과하기 어렵고 의회 관문을 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자명한 점을 고려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한 상징적인 항의 차원이다.

미국 내 1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 가운데 400만 명 이상의 추방을 유예하고 일자리를 주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의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한 상징적인 항의 차원이다.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의 전략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하버드대 '올해의 인도주의자상'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일(현지시간) 하버드대에서 '2014년 올해의 인도주의자상'(2014 Harvard Foundation Humanitarian of the Year)을 받았다.

이 상은 하버드대 기념 교회(Memorial Church)를 이끌었던 피터 J. 곰스 목사를

기리려고 제정됐다.

작년에는 파키스탄의 소녀 교육 운동가인 말랄라 유사프자이가 수상했다.

반 총장은 수상 뒤 유엔이 그동안 인권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노력을 소개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 소수자에 대한 차별,

인신매매, 가난 등을 없애려고 국제사회가 노력한 결과 성과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반 총장은 "아직 국제사회가 가야 할 길은 멀다"면서 가난, 기후변화, 핵무기, 대량학살 등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기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기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기본3인분 3+3 = 30,000원	국내산갈비2+2(480g) 20,000
	기본4인분 4+4 = 40,000원	왕갈비탕(6,000원) 볼백 (6,000원)

625세대는 단리도 아닙니다.
초대박매출
신규창업,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른점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민물수 있는 우리 지역(광주)의 본사 프랜차이즈입니다.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임점(251-8216)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싼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바라다매!! 손님은 싸게 드시고 업주는 작은마진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착한소장수는 불경기형 맞춤형 브랜드 손님을 꼭꼭적인 반응을 얻고있습니다.